

아카데미식 캐피탈리즘 시대 건강한 지식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언

사회적 가치 강조와 윤리교육 강화로 책임 있는 과학연구 이끌어야



아카데미 캐피탈리즘 시대 건강한 지식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언

사회적 가치 강조와 윤리교육 강화로 책임 있는 과학연구 이끌어야

우리는 아카데미 캐피탈리즘(Academic Capitalism) 시대에 살고 있다. 이 개념은 대학의 수입 창출을 위한 시장지향적(market-oriented)인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됐다. [슬로터&레슬리] 이후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는 대학을 통해 필요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대학은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 확보 등을 통해 펀딩 소스를 다각화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대학에 대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반면에 대학이 연구성과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게 되면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고, 대학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연구의 상대적 소홀, 특히 기초학문분야의 상대적 위축으로 인한 대학 교육 및 연구의 획일화 문제가 대두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지식의 상품화가 과학의 규범을 훼손하고 연구윤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들에 대해 공감하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카데미 캐피탈리즘은 이미 우리나라에도 상당 부분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성장동력을 모색하고자 했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을 통해 그 목표를 이루고자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연구개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작되었고, 지적재산권 관리제도를 마련해 연구자의 특허 출원과 연구성과의 상업화를 독려했다. 대학 정체성의 중심축이 교육에서 연구로 옮겨감에 따라 대학의 모습과 연구성과물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변화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학계에 과학윤리 및 책임 있는 연구에 대한 고민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아카데미 캐피탈리즘이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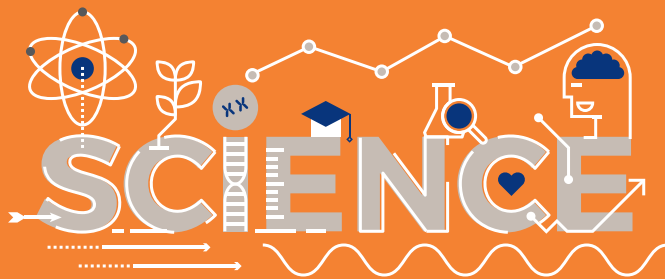
지식이 강력한 자본이 되는 이 시대에 대학과 대학 연구자, 정부가 각각 어떻게 건강한 연구생태계를 만들어야 할지 방향 설정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교수는 연구를 통한 수익창출 이전에 책임있는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며, 대학은 사회적 가치를 스스로 세워나갈 힘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는 아카데미 캐피탈리즘이 초래한 부작용에 대해 연구자와 대학에만 책임을 돌리는 태도가 아닌 조금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지난 11월 23일 '아카데미 캐피탈리즘과 책임 있는 연구'를 주제로 제131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때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카데미 캐피탈리즘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대학의 건강한 지식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해답은 '책임 있는 연구'에 있다.

2018. 12.

한국과학기술한림원

01



대학연구의 사회적 가치를 비중 있게 평가해야 한다

19세기 대학의 역할은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었고, 19세기 중후반을 거치면서 연구가 대학의 사명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된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기초적인 연구도 이뤄지긴 하지만 돈이 되는 연구 수행으로 대학 정체성의 중심축이 이동하게 된다.

대학에서 이뤄지는 연구의 상업적 가치 추구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과학연구는 고가의 실험장비와 이를 다룰 능력이 있는 고급인력 등을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연구를 통해 높은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상업화라는 가치와 과학연구는 분리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다.

이러한 흐름에 더해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는 성공가능성이 높고 경제적으로 유용한 연구를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논문성과, 특허 등의 기능적 가치만이 중요시되는 평가체계는 연구자들을 상업화 압력에 시달리게 한다. 연구자도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의 궁극적인 가치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대학연구의 경제적 가치와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룬 긍정적인 미래 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가 또한 평가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학의 연구윤리 규정과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이 비중 있게 평가된다면 대두되고 있는 관련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02

연구윤리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아카데미 캐피탈리즘은 대학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연구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대학 연구자, 시민 사이에 연구윤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통이다. 서로의 생각을 알기 위해 노력해 간극을 줄여야 하며 현장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대학의 연구윤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대학의 교육에서부터 시작해 대학원의 연구에 있어 진리탐구의 중요성과 연구윤리에 관한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신진연구자는 필수교과과정으로 연구윤리 과목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이후에도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연구 경력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가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가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인지를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아가 교육의 성과 확산을 위해 사후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자율적 연구윤리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연구윤리를 바로 세워야 한국이 진정한 과학강국에 오를 수 있다.

03

정부는 대학에 대한 전략적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 한국 대학은 대학의 난립과 재정악화 문제, 학문의 자유도 부족과 기초연구 위축, 경쟁적 연구 수주로 인한 연구 활동 안정성 부족 등의 문제로 열병을 앓고 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은 정부, 기업, 연구비 지원기관, 기부단체 간 파트너십을 통해 연구중심대학을 집중 육성해왔지만, 우리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미국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 활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의 전략적 혁신강령을 발표했다.

이 혁신강령은 한국 연구중심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 혁신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서 찾는 문제의 해결 방향은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포용적 대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GDP대비 고등교육예산액 비중이 현재 0.67%인 것을 OECD 평균수준인 1.2%까지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을 구분해 연구역량을 충분히 갖춘 대학들에 대해 연구역량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

비효율적인 정책과 행정절차들은 최소화 하고, 기초연구와 대학원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대학연구 지원의 증가분은 고위험혁신연구와 의생명과학연구 등 핵심 분야와 창의·도전적 연구과제에 투자되어야 한다. 또한, 우선적으로 배정할 과학기술예산을 매년 확보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때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대학의 연구 자율성을 확보해주어야 하며 연구와 기타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을 일관되고 투명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04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정착을 위한 체계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는 특허법을, 2003년에는 산업교육진흥법을 개정하며 대학 스스로 산학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과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가 재정지원사업에서 산학협력단 설치를 참여요건으로 내건 뒤에는 거의 모든 대학이 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기준 전국 대학교의 산학협력단 전체 수익 8조 6천억 중 산학협력을 통한 수입은 9.8%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정부보조금으로 이뤄져있다. 또한 산학협력단 체제는 방만한 운영과 비전문성 등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이라는 변화의 물결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 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학교수의 발명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가 등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 어떻게 우리나라만의 기준을 세울지에 대해 고민한 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05

창의적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을 비롯한 공공연구기관에 대단히 많은 비정규직 연구원이 종사하고 있다.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의 활성화는 이들 비정규직 연구원의 바람직한 경력대안이 될 수 있다. 대학 및 출연연구소에서 습득한 과학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거나 다른 연구기관들이나 민간기업에서 활발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창의적 혁신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 등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여전히 4분의 1이상이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무기직 전환 등 보완책이 도입된 이후에도 연수생, 박사후연구원, 연구인턴 등은 사각지대 연구인력으로 남아있다. 이공계 대학의 경우에는 과제단위로 계약하는 연구교수와 계약교수 등 비정상적인 교원양성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비정규직 의존 구조는 더욱 심각하다. 이들이 다른 부문으로 순환될 수 있는 유연한 인력관리체제가 필요하다.

대학은 교육, 연구, 사업적 활동의 균형적 추구를 통해 국가 및 사회발전의 핵심축을 담당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혁신체제의 핵심 구성요소인 산-학-연 중 대학만이 할 수 있다. 대학교수 그리고 대학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현재는 물론 특히 미래의 국가혁신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혁신체제가 창의적 혁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한 인력양성은 대학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아카데믹 캐피탈리즘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과 세심한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같은 균형이 달성되어야만 우리나라 대학의 지식생태계는 물론 국가전체의 지식생태계가 건전하게 육성될 것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과학기술 분야 한국을 대표하는 석학단체로서 1994년 설립되었습니다.
1,000여 명의 각 분야 연구리더들이 한림원의 회원이며,
각자의 역량과 지혜, 리더십을 결집하여 기초과학진흥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등 국가정책기관에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분야 국제교류와 민간외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기관이 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림원의 목소리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과학기술분야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석학들의 전문 의견을 제시하고,
첨예한 논쟁에 직면한 쟁점들에 대해 과학기술적 해결 방안과 정책 대응,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림원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보기



홈페이지

www.kast.or.kr



블로그

kast.tistory.com



포스트

post.naver.com/kast1994



페이스북

www.facebook.com/kastnews

KAST
한국과학기술한림원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136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2구(동)
TEL 031)726-7900 • FAX 031)726-7909
kast@kast.or.kr • www.kast.or.kr



9 772635 430002
ISSN 2635-4306